

유정복 시장, 한상네트워크 통해 인천 비전 알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의 다양한 재외 동포 협력 사업을 알리고,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를 견인할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라 인천 비전을 알릴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알래스

인천 글로벌도시 구축과 투자유치 미국 출장길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석해 교류 협력 논의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인천유치 쟁점

카 앵커리지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대회와 관련해 인천 유치활동 등을 펼치고 대회장에 마련된 인천 홍보관을 방문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인천 투자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간 국내에서만 연례 개최되던 '세계한상(韓商)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개최되고, 내년에는 국

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문을 연 후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규모 행사다. 특히 전 세계 50여 개국 3000명(한국 및 동포기업 1500명, 미국기업 1500명), 참가객 3만 명으로 예상되며 인천에서는 2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가 시작되는 10월 11일에는 개막식 참석, 인천 홍보관을 방문해 인천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22차 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에 앞서 유 시장은 자매도시인 앵커리지와 버뱅크를 방문해 국제 우

호 협력관계도 다진다고 알렸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데이브 브론슨 앵커리지시장을 개별로 만나 양 지역 간 인적교류 및 교역, 관광 등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재외동포 중 미국 정·재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미연방 고위공무원, 한인 경제인 단체 등을 만나 인천 재외동포와 주요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출범 이후 첫 미주지역 방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120년 미주 이민 역사의 도시이자, 750만 재외동포의 거점도시인 인천은 진정성을 가지고 동포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와 거주 활동이 가장 편리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재외동포를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르포

인천시, '음식물 감량기' 독점업체 무혐의는 당연했다!

인천시는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환경부로부터 부평구 기초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업적을 이뤄냈지만,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했던 A 업체는 '독점 계약'이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언론 보도 등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한편, 경쟁사 B 설치업체는 A 업체를 언론에 독점 등 내용을 제보했다.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C 언론사가 보도해 부평구가 대응했다. 정정보도가 나와 잠잠한 듯 보였지만 B 업체 민원은 계속됐고 A 업체는 계속 시달려야 했다.

실제 B 업체는 본지에 찾아와 A 업체 관련 사건을 제보했다. 양쪽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상반되어 응하지 않았다. 이어 5대 지방지 중 한 곳인 D 언론사는 인천시와 A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신문 1면 헤드라인, 인천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독점업체 위법에도 무탈'이란 제목 등 5회 걸쳐 시리즈로 게재했다.

이에 편승한 인천시의회와 각 구의회도 집중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한동안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시민을 이롭게 하는 자원순환 정책은 일시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 시민단체까지 개입해 논란은 더 커졌다.

시민단체는 A 업체를 '계량에관한법률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수 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수사대는 공무원 유착 등 비롯해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A 업체를 불송치했다. 문제는 수사가 들어가도 A 업체는 완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로가 막혀 버티느라 곤경에 빠졌다.

A 업체 대표는 동종 B 업체로부터 "3년간 인천지역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최근 구강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간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발주처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품설치를 보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악성 민원 등으로 제품 발주 자체를 꺼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납품지연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선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동종 업체의 민원도 민원이었지만 언론사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은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설명이다. "A 업체는 관련 사건의 배후 등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비리 업체로 인식된 피해는 몸과 정신까지 만신창이를 만들어 암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또 법무법인 F 로펌에서 억울하게 고발 당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사실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들은 환경 분야 자원순환정책 중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은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성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내부 지침 기준이 불분명해 선제적으로 수정하면서 음식물처리 첫 사업은 성과를 냈다. 시민과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제는 시민들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협력하는 정책을 퍼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비운 뒤 땅은 더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와 민간 협회는 작년 B 업체 음식물쓰레기감량기에 미승인된 불법계량기를 부착된 사실을 조사해 고발했다. 감량기는 서울시 외 제주지역 등 공동주택에 대량 납품한 사실 등 업계 소문은 타 업체 민원 제기보다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재윤 기자

사설

인터넷 정보, 넘칠수록 더 추락하는 신뢰 보완할 때

유명인사와 연예인 등 사진과 글이 게재되면서 비트코인 등 출처가 불분명한 기사와 같은 내용이 웹으로 노출되어 나도 살까 투자 욕망을 부추기고 있어 부자가 된 느낌과 상상을 준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여러 방면의 노출 내용을 믿고 자신의 정보를 사이트에 등록했다가는 해외에서 발음이 불분명한 한국말 전화는 투자 등을 권유하는데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다.

전화를 끊어도 끝없는 국내외 전화, 국민은 경험했고 개인정보는 다 털려 떠돌고 있다. 이에 대기업 영업사원들 전화까지 예고가 없다. '고객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시작된다.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신상을 묻는다. 휴대전화 및 인터넷 조작이 어려운 층 국민은 거래하기 힘든 은행과 항상 보이스 피싱 대상으로 노출되어 따라가기가 힘들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낳은 불신은 정상적인 것까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불신이 판치는 포털 정보는 넘칠수록 더 신뢰성이 추

락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의 온상이 됐다. 인터넷 정보는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우리는 자신의 신상을 응대하면서도 매우 불안하다. 혹시 내 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국민의 괴로움이다. 사기 범죄는 이제 일상화가 됐다. 강·절도보다 더 무서운 범죄로 부상했다. 지능적인 범죄 때문에 늘 불안하다. 강력범죄 수사 인력보다 지능수사팀이 보강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 수사의 인력은 지능팀이 대세지만 사기행각 범죄의 형량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첨단 인력보강은 해커 대응할 수준의 인재물 수사기관이 대거 공채나 채용 시점을 갖추고 있는 나라지만 경찰 일선은 인력만 늘렸지 실제 인재의 풀은 제한적이다. 해커를 잡을 정도의 지능팀 일당백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이슈 범죄의 체포 확률과 그러

하지 않은 수사 검거율의 결은 다르다. 주민 등록증도 가법계 위조할 만큼 지능적으로 발전된 나라,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다. 민생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사실부터 챙겨야 한다. 광고 및 전화의 폐단은 일상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방어권의 권리보다 침해가 우선인 나라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국민 고통은 매일 시달려야 하는 일상이 됐다. 광고 전화 등 싫다고 해도 또 다른 영업사원에 의하여 걸려온다.

간혹 미끼를 던지는 대기업 영업 행위에 시간을 뺏긴다. 정부 대안을 빨리 찾으라는 것이 여론이다. 싫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화가 계속 걸려와 난감한 국민은 화가 난다.

070은 잘 받지 않으니까, 지역 전화번호로 온다. 이후 전화하면 불통이다. 몰염치한 영업행위는 전화 당국이 수익을 때문인 더 집착하고 있다. 대안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 쇼핑몰 물건을 살 때도 개인적 정보를 묻는다. 1회로 한정해야 한다. 기업영업 연관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통신정책은 영업 위주로 가고 있어 국민을 내팽개치는 정책은 큰일이다.

국회는 매일 싸움박질이다. 국회의원은 별일 아닌 실적 법안이나 만들 것이 아니다. 실제 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닿는 법안 발의가 중요하다. 대기업 영업활동 등 횡포가 매우 심하다.

쇼핑몰 기업 물음에 답변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현실은 내 정보를 다 넘겨주어야 한다. 기록은 고스란히 저장된다. 넘어간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 한정된 거래만 사용토록 요구된다.

정부는 국민이 지적하는 SNS 사기 범죄와 보험사·쇼핑몰·상조 등 실생활을 타격하는 반복 괴롭힘을 언제든 개인이 해결될 수 있는 손쉬운 차단 방어막 개선을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